

건설공사 설계비 내년부터 실비정산

“고품질 설계 확보 기대”

내년부터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이 이뤄진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사비에 일정요율(1.24~5.98%)을 곱해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서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 숫자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 지하철 공사 2.6km와 단순 일반도

로 14km의 설계대가를 똑같이 지급해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설계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연말까지 상수도 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설계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은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동계오륜 국비 717억 추가 확보 총력

도-국회의원 공조

급수시설·진입로 등

강원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717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내년도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 사업비 1599억원 가운데 미 반영된 617억원(경기장 건설

398억원, 진입도로 219억원)과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비 100억원 등을 정치권과 공조해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과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최소 착공비 등이 포함된 최소한 예산인 1599억원(경기장시설 978억원, 진입도로 621억원)을 요청했지만 경기장 건설 580억원, 진입도로 402억원 등 982억원만 반

영되고 617억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에 제외돼 특별법이 아닌 일반국고로 지원받아야 하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비 100억원은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830억원이 소요되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와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식수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2일부터 시

작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4조40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계올림픽 관련 중요 예산이 일부 삭감되거나 미 반영된 만큼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